

두바이 COP28 공동선언문 화석연료 퇴출·감축 담길까

산유국·배출 국가들 반대
미·유럽 등 기후 취약국 찬성
내용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고 있는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 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산유국들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감축을 공식화해선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어떤 내용이 선언문에 담길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COP28 의장인 술탈 알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기후변화 특사는 10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COP28 당사국 장관급 인사들을 모아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폐회일인 12일 COP28 당사국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절충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을 놓고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면서 합의가 진전을 겪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국가와 주요 산유국이 아직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등에 명시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려 하는 탓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저개발국을 비롯한 기후변화 취약국 등은 화석연료 퇴출 문제를 합의에 포함하는 데 찬성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은 지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를 주도하는 사우디와 러시아 등은 화석연료 퇴출 합의가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안전합의를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참가자들이 넓은 방에 등글게 둘러

앉아 의견을 나누는 '전통 아랍식'으로 열렸다.

알자베르 회장은 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모두 유연하고 타협을 받아들일 마음을 먹고 왔길 바란다"며 "반대와 정쟁은 뒤에 남겨두고 떠나달라"고 호소했다.

COP28 참석자들의 발언에서도 신경전이 한창인 COP28 장내 분위기가 읽힌다.

유럽측은 이번 회의가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것이므로 실수가 없어야 하지만 서약을 뒤로 미루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빨리할수록 고통은 줄어들 것"이라며 화석연료 사용 폐지 가속화에 힘을 실었다.

제니퍼 모건 독일 기후특사는 AP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원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는 건 매우 분명하다. 절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견이 확연히 드러난 회의장 상황을 전했다.

'염려하는 과학자 연합'의 레이철 클리터스 박사는 현장 취재진에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큰 후발주자이자 고집을 안 바라는 나라는 단연 OPEC 국가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 석유 수출국이자 OPEC을 사실상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는 "탄소 배출 감축을 COP28이 다뤄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의 관점과 우려, 각각 저마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산유국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와 석유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현실과(기후변화 해법)이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의 대표 산유국 이라크도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최종 공동성명에 포함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COP28 당사국들이 지금까지 공언한 약속을 이행하더라도 목표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WHO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세계보건기구(WHO)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이어지는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적 지원과 전쟁법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WHO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집행이사회가 가자지구의 제약적인 인도주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의료진의 접근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구호의 즉각적이고 일관되며 방해받지 않는 통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든 무력 분쟁의 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 및 의료진 보호와 관련해 주어진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안이 위기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위기 해결의) 발판"이라며 "휴전 없이는 평화도 없고 평화 없이는 보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은 오는 12일 총회를 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이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됐다.

유엔 총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향해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총회에서 채택되는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자선모금 산타 달리기 행사 10일(현지시간) 오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시민들이 빨간색 수영복 차림으로 거리를 달리고 있다. 이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자선단체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침몰하는 日 아베파...기시다, 비자금 의혹에 대거 물갈이

연루 의혹 각료·차관급 인사
자민당 요직 의원들 경질 나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대 파벌인 '아베파'(정식 명칭 '세이와정책연구회')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조만간 칼을 빼 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정부 각료와 차관급 인사는 물론 자민당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아베파 소속 의원을 모두 물갈이하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른바 '아베파 비자금 게이트'를 수수방관하다가 정권 유지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을 뒷받침했던 아베파를 일소했다가 자칫 역풍을 초래해 정권 기반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시다 내각에서 각료로 활동하는 아베파 의원은 정부 대변인이자 총리관저 2인자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등 4명이다.

차관급인 부대신과 정부관으로 임명된 아베파 의원은 각각 5명과 6명이다.

이들 중에 비자금 조성 의혹이 보도된 인물은 마쓰노 장관과 니시무라 경제산업상뿐이지만,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에 속한 의원을 모두 정부 고위직에서 사퇴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 관측이다. 이에 더해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위원장, 다카기 쓰요시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상원) 간사장 등 자민당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아베파 실세 의원들 사실상 경질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아베파는 2018~2022년에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이른바 '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매한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자금을 돌려줬지만, 이를 회계 처리에 공식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정부와 자민당에서 고위직을 수행 중인 아베파 인사들을 전원 교체하려는 데에는 아베파 비자금 의혹 수사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마쓰노 장관과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정무조사위원장 등 기존에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6명 외에 하시모토 세이코 전 올림픽담당상과 오노 야스타다 의원 등 4명도 5년간 1000만엔(약 9000만원)을 넘는 비자금을 받고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비자금 게이트와 관련해 실명이 거론된 아베파 의원은 벌써 10명 정도인데, 도쿄지검 특수부가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3일 이후 수사를 본격화하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시다 지지율 22.5%...정권 출범후 최저

일본인 10명 중 9명꼴로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정식 명칭 '세이와정책연구회')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민영방송인 후지뉴스 네트워크(FNN)와 함께 지난 9~10일 진행된 전화 여론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책임을 묻는 문항에 '많이 있다'와 '약간 있다'를 합한 수치가 87.7%였다고 11일 보도했다.

최근 5년간 1000만엔(약 9070만원)을 넘는 비자금을 챙긴 의혹을 받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대응에 대해서는 87.4%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과 국회 등에서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삼가고자 한다",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비판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비자금 의혹 관

련 질문에 "제 정치집단(아베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뒤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경질설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8.3%는 정치자금과 요직을 나누는 자민당 파벌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 11~12일 조사보다 5.3%포인트 하락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인 22.5%를 기록했다.

산케이와 FNN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최근 3개월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